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TECH-ESCROW)

2018. 7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개

설립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경쟁력 제고, 양극화 해소로 동반성장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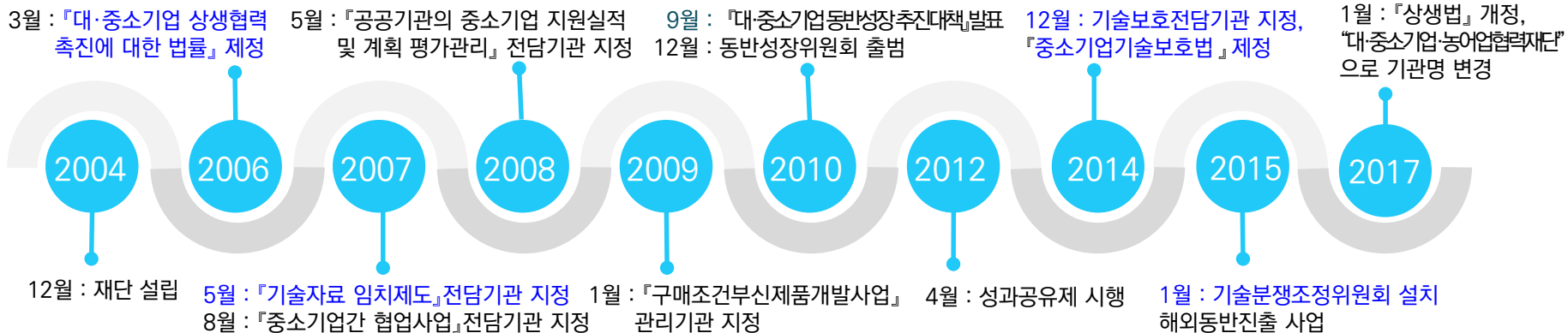
* 설립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요역할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거래공정화 실현,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와 경쟁력 향상

-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 운영 및 평가 지원
- ✓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운영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 동반성장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추진 등

연혁



02

기술보호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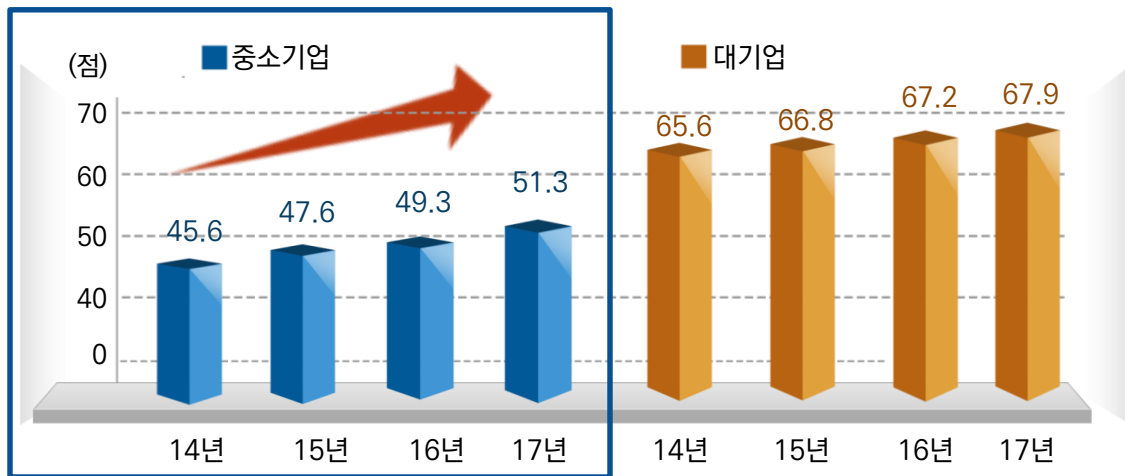
1. 기술보호 필요성

- 상당수 기업들은 기술개발, 판로에는 적극적이나,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는 무관심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융·복합, 기업간 협력 확대, 첨단기술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간, 경쟁사간 기술탈취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
 - * 미국 철강업체 US Steel, 태양에너지 Solar World 등이 중국정부가 고용한 군사해커에 의해 정보 유출
-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이 유출로 분쟁 발생시, 피해 입증책임의 어려움, 막대한 소송비 부담 등으로 분쟁대응이 어려움
- 과학기술, 방산기술, 기술인력 등이 해외 유출시 국부 피해로 직결
 - * 기술유출 피해업체 예상 피해액(연평균): 50조원 = 4,700개 연 매출액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시 시간/비용 부담 및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움
 - *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 : 24%, 손해배상 인용금액 : 2.4억원(청구금액의 18.5%)
 - ** 소송 소요기간(민사) : 1심 284일, 3심 782일
 - *** 특허소송 패소율 : 1심 90%, 2심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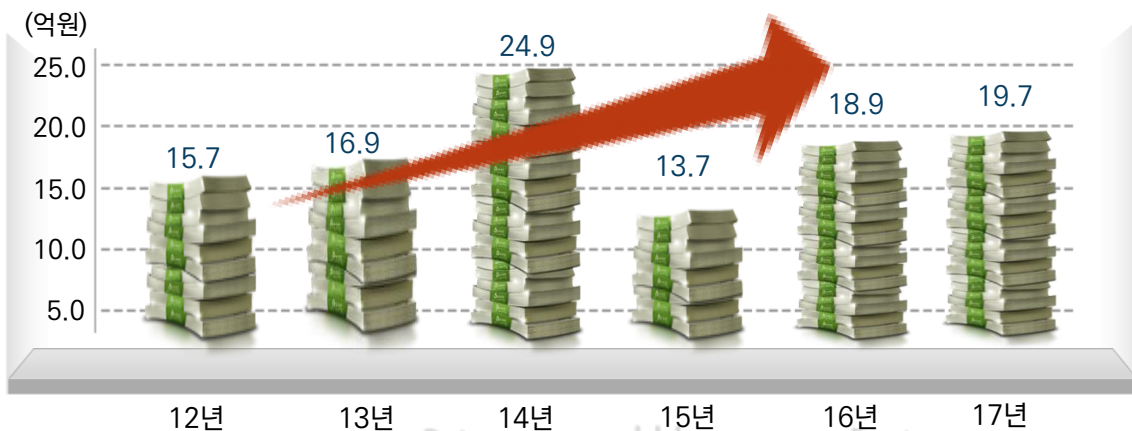
2. 중소기업 피해현황(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점차 증가
- 대기업 대비 취약 수준 (75.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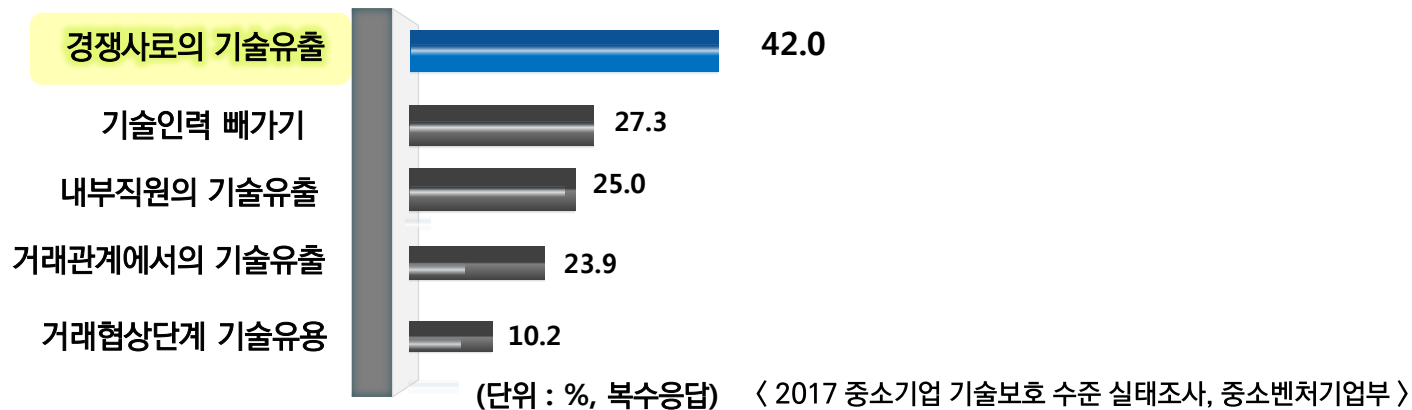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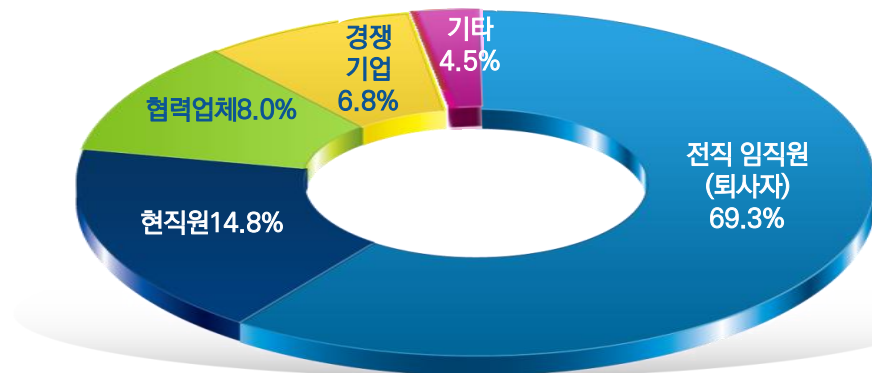
- 매 조사시 기술유출 건당 13억 이상 피해 발생

3. 중소기업 피해현황(2)

- 기술유출 피해유형으로 주로 경쟁사 유출(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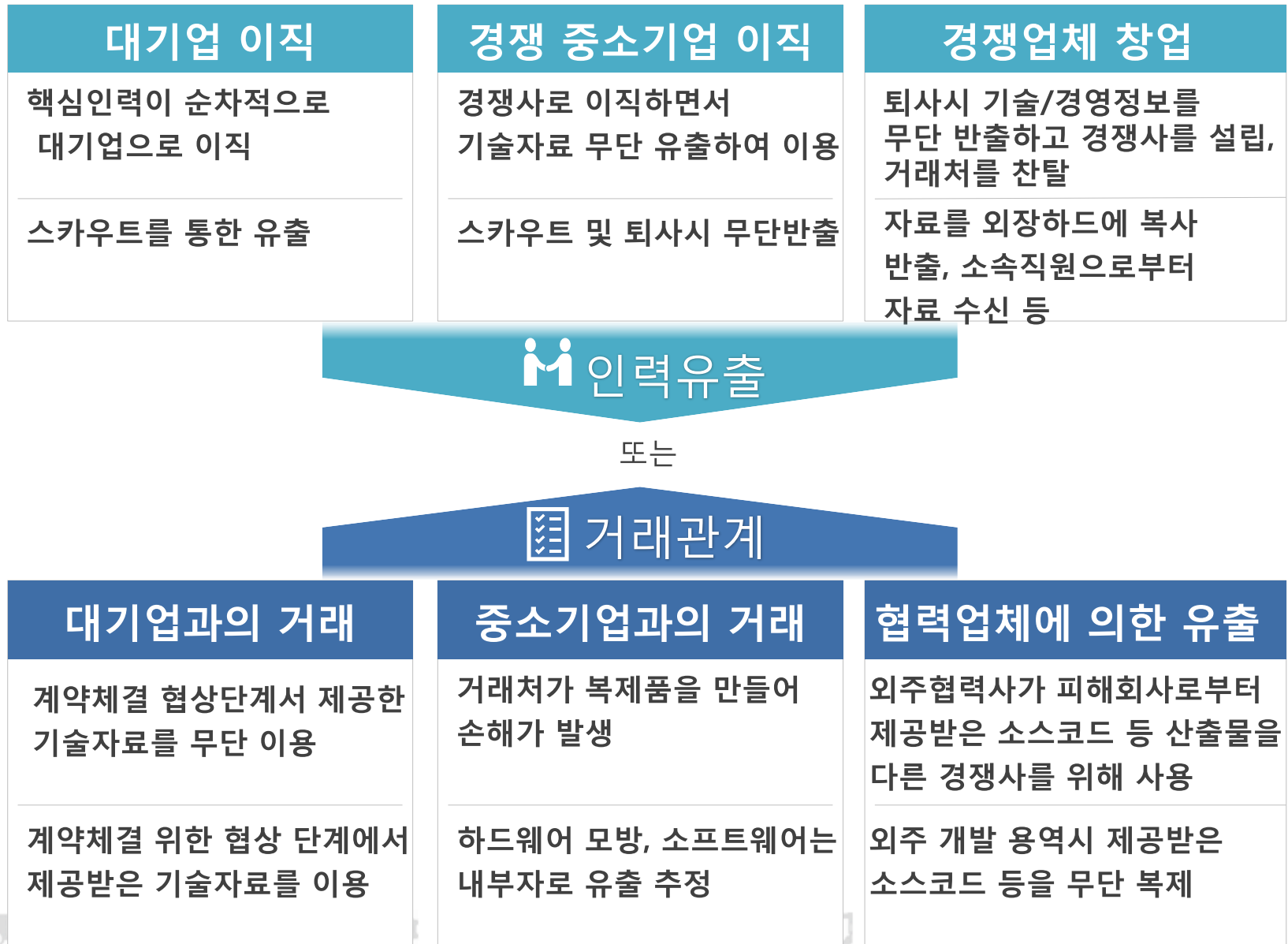
- 유출관계자는 주로 퇴직 임직원(69.3%)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4. 기술유출 피해 유형



5.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10대 핵심수칙)

10대 핵심 수칙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 수립 실시	기술보호 관리규정 제정을 통하여 영업 비밀 분류, 취급방법,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보안관리 전담인력 필수 지정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전 직원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전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고,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는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5	핵심인력 퇴직시 철저히 사후관리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고, 서류/ 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징구하며, 영업비밀 준수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등급 (극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7	중요서류는 별도보관 반출관리	중요서류는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자료를 임의로 복제·반출 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합니다.
8	중요설비·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 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인가된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며, 카메라·스마트폰 빈입을 금지시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9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임치로 보호	개발기술은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10	정보시스템 보안필수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사용 및 기술자금이 (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 기술자료를 지켜야 합니다.



03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Escrow)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제도도입

정부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영(2010. 11)

중소기업 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시 법적 추정력 부여

*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제도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

기술임치의 목적

핵심기술을 재단에 맡겨둌으로써,

중소
기업



거래·경쟁사의 기술탈취 방지
핵심기술 유출, 사전예방
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 입증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파산 및 폐업 시,
안정적인 제품 공급 및 유지보수



대기업

* 관련 근거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기술임치 활용사례(1)

사례1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분쟁 사전예방

A 공기업은 중소기업 B사와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B사의 각종 자료 및 기술정보를 요구

기술자료 임치를 통한 기술분쟁 사전예방

B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여
기술 소유권을 인정 받아

A 공기업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술공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효과를 누림



기술임치 활용사례(2)

사례2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용 방지

전기기기를 제조·판매하는 G사는

핵심기술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고민**하던 중

유관기관의 소개로 기술임치제도 도입

특허에는 등록할 수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 등을 보호받음으로써
기술개발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례



기술임치 반영현황

정부부처에서의 임치반영 현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12)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요구금지 강화
-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시 보호장치 사용
 - *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표준계약서
-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제도
 - * 입증책임 전환·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중소기업 행정·법률·물적 지원 강화

-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 수사(검찰, 경찰, 특허청), 행정조사(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 기술보호위원회, 기술탈취 근절TF, 지방 중소기업 보호 강화
-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 공익법무단, 국선대리인, 평가지표 도입
-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 특허공제, 지재권 소송보험, 집중심리제, 정책자금 등

기술보호 기반 구축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
 - * 기술거래 강화, 공동R&D,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나눔 장려
-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 임직원 교육, 기획방송·기사, 광고매체별 홍보



기술자료 '임치제' 로 탈취 막고...(18.6.28, 서울경제)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기술자료 '임치제'로 탈취 막고, 징벌적 손해제로 처벌 강화

<5골> 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홍종하 장관 '1호정책' 임치제도 중심 지재산 활성화
특허청 조사 강화하고 손해액도 3배서 10배로 증액

심우열기자 2018-06-28 17:22:44 기획연재

지난해 11월 23일 홍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핵심 키워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였다. 당시 그는 "가장 역점을 둘 사안은 기술탈취 문제 해결로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됐지만 사실상 '잊힌 정책'이던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다시 양지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한편으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기술탈취 방지=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핵심기술과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사전에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고 기술유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개발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보관된 기술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대기업과 기술탈취 관련 소송을 치러야 하는 중소기업에 유용하다. 미국과 영국에선 이 제도를 1930년대부터 도입해 효과적인 기술보호 수단으로 쓰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임치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보관한 기술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도 있다. 수동적으로 기술탈취를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금유통이나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치기술을 이용한 대출금리를 최대 1%까지 감면하고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도 줄이며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진 않은 상태다. 대기업과 거래할 때 기술을 임치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술임치 계약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3년 사이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임치계약 건수는 2013년 5,685건을 보이다 2015년엔 8,562건으로 증가했지만, 2016~2017년엔 9,0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5월말 기준으로 2018년 체결된 임치계약은 총 2,572건이다. 이에 대응해 중기부는 지난 2월 기술임치가 의무화된 표준화도급계약서를 기존 13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으로 확대하며 기술임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10배로 증액=기술탈취에 대한 응징수단도 보강하고 있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5개 법률에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하도록 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등에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으로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높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해 '숨방망이' 징벌로 끝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49억원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아이디어 탈취를 처벌할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아이디어는 주로 특허로 보호하기 전에 탈취돼 기존 특허법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다. 이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제안, 거래상당, 입찰, 공모전 등의 거래관계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돼 오는 7월부터 특허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 시정·권고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4월 발의된 부경법 개정안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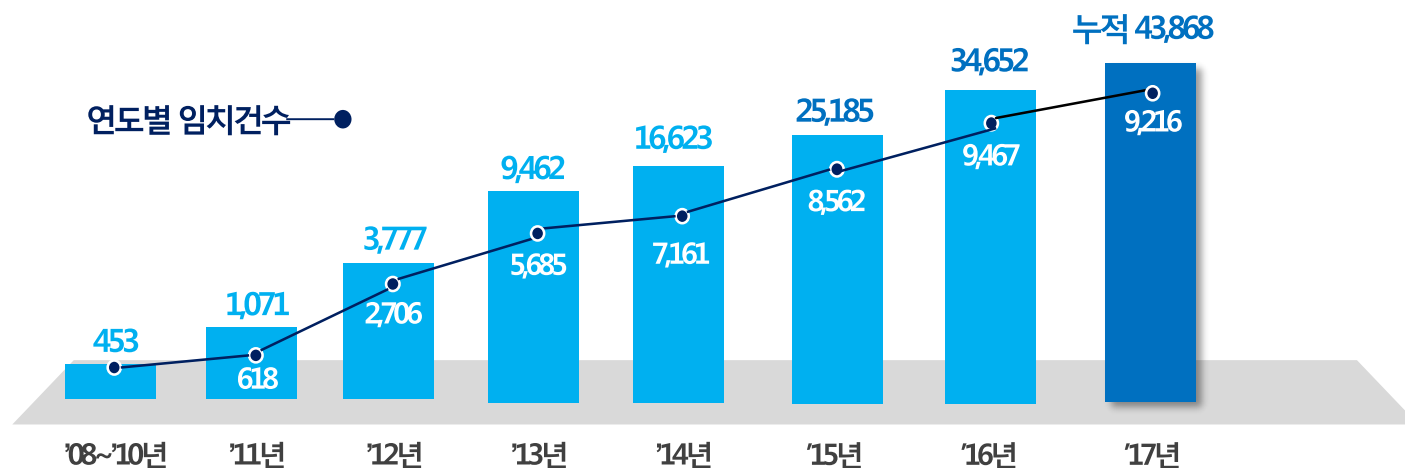
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보관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R&D)사업과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취득, 기술대여까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당장 기업 입장에서 기술을 보관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지만, 임치제도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풀만 마련된다면 기술보호뿐 아니라 기술활용과 기술확산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의 '제값'을 매기기 위한 지렛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자꾸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을 뺏는 사례가 늘어나면 업체 사이에서 '우리도 제값을 주고 기술을 사야 하나'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제 값을 내고 기술을 사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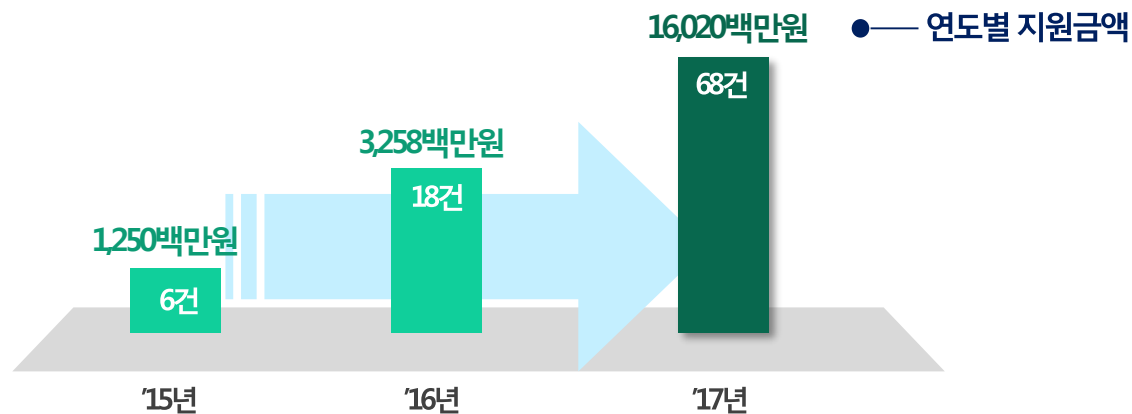


기술임치 및 활용 실적

기술임치 현황 (기술임치 건수, 누적)



임치활용 현황 (년도별 실적)



기술자료 임치센터 및 보관설비

기술자료 임치센터 운영

www.kescrow.or.kr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 | 사이트맵 | 이용매뉴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임치서비스 기술임치길라잡이 자료실 참여공간 활용지원서비스 임치센터 소개

기술임치 계약신청

신청하기

기술임치 계약정보

바로가기

기술임치 대상물

기술임치 계약유형

기술임치 이용효과

2018년 5월 8일부터 창업·벤처·혁신형기업 대상으로 기존 임치계약 수수료의 1/3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대상 안내

감면대상 창업·벤처·혁신형(기술, 경영) 중소기업

1. 창업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개업년월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2. 벤처기업 : 각 인종(군)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인종(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협회
3. 혁신형기업: 혁신형(기술, 경영)*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되어 확인서를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형(메인비즈협회)

※ 단, 자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만 할인 적용

수수료 신규(년) 20만원, 경신(년) 10만원 시행일자 2018.05.08.~

문의처 기술자료임치센터 (https://www.kescrow.or.kr)
02-368-8484, kescrow@win-win.or.kr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세히 보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안내

기술임치 계약안내

R&D 임치안내

Q&A 바로가기

원격지원

이용매뉴얼

이용서식

이용사례

안내자료

공지사항 질문게시판 언론보도

임치수수료 지원(100%) 안내_관경산업...	2018-05-21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안내	2018-05-04
임치수수료 지원(100%) 안내_부산광역시...	2018-03-12
임치수수료 지원(100%) 안내_대구, 경북...	2018-02-22
브라주저 최신 버전 다운로드	2017-06-29

기술임치 문의/상담 02) 368-8484 거래알선 및 불공정거래 상담콜센터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집거부

발인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
주소: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룩스벤처
COPYRIGHT(C) 2016 대·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이중금고 운영

독립된 보관시스템

- 외부와 차단된 독립공간에
- 임치보관 설비 구축
- 이중화된 임치물 보관설비

최적의 설비시스템

- 항온·항습 시스템 가동
- 화재 감지시스템
- 자동 진화시스템 가동

철저한 통제시스템

-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통제
- 임치실 3중 잠금 장치
- 24시간 CCTV 감시시스템



기술임치 이용절차 및 수수료

기술임치 이용절차



기술임치 수수료

유형		수수료	납부시기
신규	삼자간	300,000(원)/년	최초 기술자료 임치계약 이용 시 납부
	양자간(다자간)		
갱신	삼자간	150,000(원)/년	신규계약 1년 후 계약 갱신 시 납부
	양자간(다자간)		

창업,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임치 수수료
1/3 감면

신규 : 20만원
갱신 : 10만원

※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기술보호' 지원)

사업개요

•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기술보호' 바우처를 지원, 기업경영 활동 및 사업안정화에 기여

지원내용

• 2년 간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수수료 무료 지원(연 100만원 이내)

* (연간 임치계약수수료) 신규 200천원, 갱신 100천원 [예시] 1개사 최대 5건 신규계약까지 지원: 200천원x5건)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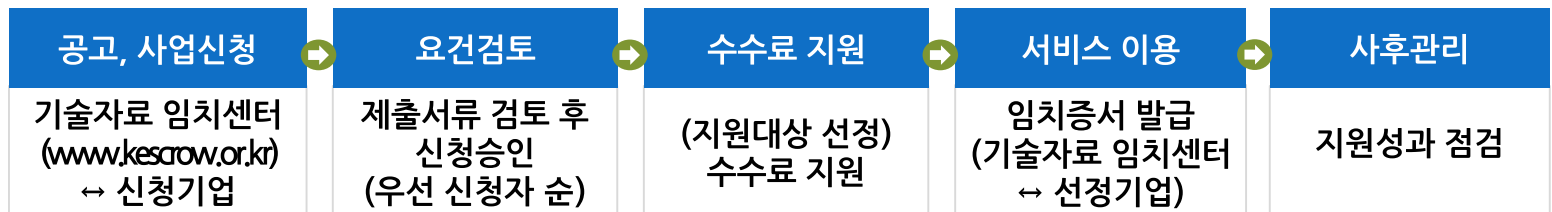
* (제외대상) 금융기관의 규제중, 세금 체납 또는 휴·폐업,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된 자 또는 기업

신청기간

• 수시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절차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온라인 또는 임치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escrow@win-win.or.kr



기술임치 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임치된 기술을 활용, 담보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마련 및 기술 거래 지원

지원대상

- '제품화 완료/양산준비/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당해 기술 적용 매출 발생해도 가능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임치기술 기본정보 공시에 동의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담보대출형

- 임치 기술의 기술평가등급(B등급 이상)에 따라 기술가치금액 이내의 자금 융자

기술거래형

- 임치 기술 거래(기술사용 이전)하려는 기업의 기술거래 활동 지원

지원내용

평가 수수료 지원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무료)

보증료 감면

- 보증수수료 감면 (최소 03~최대 05%)

담보대출 우대

- 대출금리 감면 (부분보증서 : 최대 0.5%, 전액보증서 : 최대 10%)
- 중도상환 해약금 감면 (최소 30~ 최대 50%)

기술거래 지원

- 기술이전 중개 수수료 감면 (기술 거래액의 2% 공공기관 적용기준)



04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법률근거	신청기간	기업부담비용	운영기관
1	기술보호통합 상담신고센터	전문가 상담 제공, 기술유출 신고접수 및 경찰청연계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2조	상시	무료 (02-368-8787)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2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전문가 기업 현장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2조	상시	무료(3일)	
3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28조	상시	조정 : 50,000이내	
4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 악성코드 해킹 등 보안관제, 모니터링 지원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8조	상시	보안관제는 장비보유시, 무료 (장비 임대가능)	한국산업 기술보호협회
5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독자적인 회사내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선정평가 실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9조	3월	최대 50%, 4천만원 지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6	기술보호 인식개선	기술보호 필요성, 방안 등 인식 개선 및 보안역량 수준제고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7조	상시	무료 (AIP 제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1.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사업개요

- 기업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지원 (5,300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상담분야

- 보안상담, 법률상담, 신고·수사, 기술보호정책연계

센터운영

- 법률전문가(1), 보안전문가(1), 사업담당자(1)
- (유선) 02-368-8787
- (방문) 영업시간 내 방문상담 가능
- (온라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 *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지원절차

신청·접수	→	종합 상담	→	사업 지원	→	사업 수행	→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 02-368-8787 보안(1번), 법률(2번)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 방문 : 재단 내 신고센터 (서울 구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유출유출,지재권 침해 법률자문 • 유형별보안상담 • 기술보호사업안내 및수혜기업사후관리 •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이버 경찰청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진단관리,보안교육, 심화자문연계등 • 신고·수사 경찰청 연계, 일반신고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성과 제고 우수 사례 발굴 등 강화 • 사업수행후만족도조사, 전문가평가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 관리 및 통계 취합, 전문가 확충 • 전문가역량강화교육 평가,사업홍보등



2.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사업개요

-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문가의 현장진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800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분야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분쟁대응)

지원내용

- 보안 지침, 정책서 수립
-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
- 자산관리(자산 식별 등)
- 인적 보안관리 등

- PC, 서버, 네트워크 보안
- 정보보호자산 위험 분석
- 서버/PC/네트워크 보안

- 기술유출 피해 기업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상담

10일 이내 (3일 무료 / 심화자문 최대 7일 가능, 75%지원, 기업부담액 75,000원/일)

지원절차

상담신청

- 기술보호울타리 온라인 신청
(www.ultari.go.kr)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전문가배정

- 지원자격 검토 후 전문가 배정
 - 지역 및 분야별 배정
- 보안, 법률전문가: 200명

현장사전진단

- 기술보호역량 진단
- 보안교육
- 심화자문 여부 결정

(필요시) 심화자문

- 사전진단결과 보안문제 발생시 기업당면과제 해결
- 세부 보호방안수립

완료보고
만족도 조사

- 최종 완료보고서
- 온라인만족도조사



3.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사업개요

- 기술 분쟁 중소기업의 신속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한 해결 (30건)

* 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28조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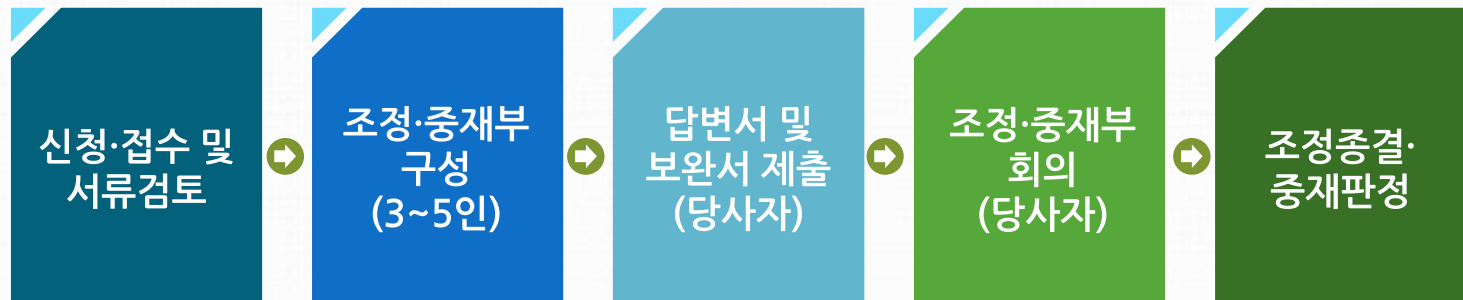
- 전·현직 판사 및 변호사 등: 29명, 기술분야 전문위원: 21명
- 3~5명으로 구성된, 조정부의 합의 도출 또는 중재부의 판정

- 재판대비 짧은 소요기간(조정: 3개월, 중재: 5개월)
- 저렴한 비용(조정: 10,000원~50,000원/중재: 20,000원~)

지원내용

- (신청전)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신청후) 조정에 소요되는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5백만원/1기업) 지원(선지급 20%, 종료후 80%)
- (조정 불성립시) 소송비용 지원(5백만원 한도, 최대 10백만원)
- (필요시)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절 차



3.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성립사례

신청내용

A사는 에어컨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 B사는 A사의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동일 기업에 납품, 이후 A사의 매출액이 급감, 이에 대하여 B사에 ○○원의 손해배상 및 물품 제조 중단과 판매중인 제품전량 폐기 요구

진행경과

접수(3월)→조정부구성→조정부 제1차 회의→제2차 회의→제3차 회의→조정 성립(6월) * 성립까지 약 3개월 소요

조정결과

A사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기로 하여 조정 성립

조정내용

(생략).....특허사용료로 ○○년 ○월말부터 매월 금○○만원을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생략) B사는 향후 권리의 유효성 및 범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

불성립사례

신청내용

A사는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B사(대기업)의 요구로 공동특허권자 등록 및 기술의 기밀자료를 제공. B사는 자체 신규기술 개발로 제품 납품중단 및 공동특허 포기를 통지, 하지만 B사는 A사의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용. A사는 ○○억원의 손해배상과 공동특허 사용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

조정결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지급 등에 대한 조정안을 B사가 수락하지 않음

조정내용

B사는 A사에게 ○○년 ○월 ○○일까지 금 ○○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B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B사는 A사에게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생략)

사후지원

법원 소송 진행으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1000만원 지원
* 사건 접수 후, 기업 지불 비용의 40% 지원 → 1차법원 변론 진행 이후 60% 지원



4. 기술지킴서비스

지원내용

- (보안관제) 해킹과 같은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 (7,000여사)
 - * 회사 내 보안 장비(UTM, IPS, IDS, 방화벽 등) 보유시 보안관제서비스 무상 제공
- (보안관제외)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및 악성코드탐지서비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서비스내용

내부정보유출 방지서비스

* 30개라이선스/1기업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 30개라이선스/1기업

보안관제서비스

- * 장비 보유(방화벽, IPS 등)시 무료
- ** 장비 임대료 : 9~19만원/월



• 사례: 휴일 야간 시간대 **연구소장의 기술유출 시도 탐지** 후 보안담당자에게 통보

• 조치: 해당 PC 분석 후 추가적인 기술유출에 사용된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 조치 및 교육

• 사례: K사에 악성코드탐지 설치 후 **바이러스 발견/다수의 악성 코드 탐지 후 삭제**

• 조치: 원격지원으로 이동식 저장장치의 초기화 작업 및 보안업데이트 진행

• 사례: 사내 이메일계정 **해킹사고** 발생/해커는 무역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접근하여 부당 거래 시도

• 조치: 이메일 접속 계정 IP 변경 사실 탐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유의 조치 진행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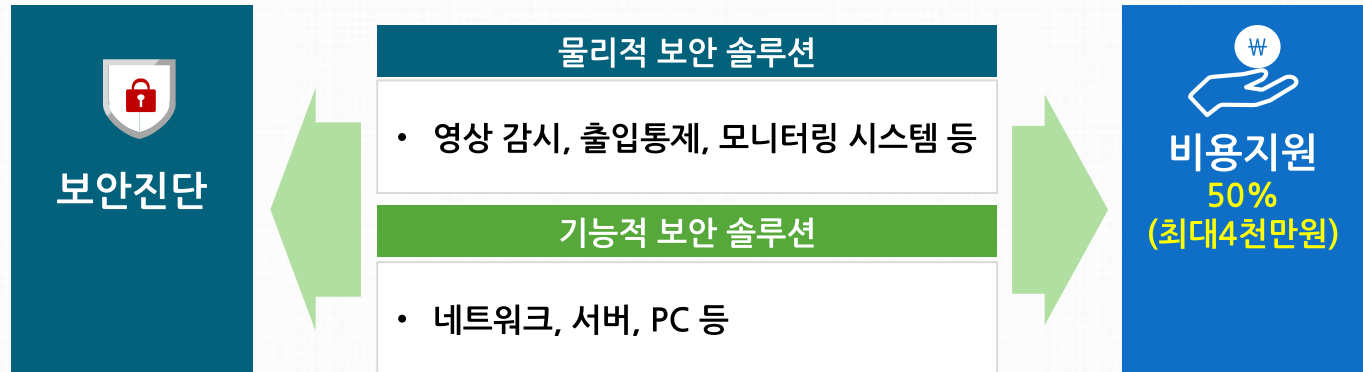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50,~7053)



5.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 후 기업환경에 맞는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물리적보안시스템 구축의 경우 지문인식기·카메라 등 단순 장비구입비용은 기업부담금에 해당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정보화 경영체제(MIS) 인증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사례

- G사 연구소장은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술자료를 클라우드 웹하드에 무단 복사 후 경쟁업체에 유출 시도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시스템으로 차단함

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58, 0766(신청기간: 5월중)
* 홈페이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ft.smplatform.go.kr/>)



6. 기술보호 인식개선

개요

- 기술보호 인식개선 및 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교육 지원
- 중소기업기술 보호 유공자 대상 포상 수여

*추진근거: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중소기업 기술보호 홍보·교육)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설명회

-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대기업 행사 연계 기술보호 필요성 및 지원제도 소개
- 전시회 등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술보호 현장부스 운영
-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및 컨설팅 제공 등



기술보호 필요성
인식 및 지원제도
활성화

교육

-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중소기업 경영자 지식재산 관리능력 함양(6개월, 매주 수)
 - * 과정특전: KAIST 총장 명의 수료증, 동문자격 부여 등(등록금: 500만원(중소기업은 50%))
 - * 모집기간: (상반기, 도곡) 1~2월, (하반기, 대전) 7~8월, 홈페이지: <http://futures.kaist.ac.kr/AIP1>
- (중소기업 내부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과 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CEO, 관리자 등
교육실시로
기술보호인력양성,
내부 역량 강화

포상

-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공자 대상 포상 수여(*17년 기준 24점(대통령1, 국무총리1, 산자부9, 중기부13))
 - * 신청기간: 3~4월 중(일정변경 가능,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 참조)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재호 과장, 노기호 대리(☎: 02-368-8418, 8924)



기업의 정보보안,
당신과 기업을 살립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02-368-8484

